

정책연구

**차기정부의 스마트컨버전스 산업별 세부 정책 방안**  
**스마트컨버전스 법과 제도**

**2012. 12. 27.**

**스마트컨버전스 특별위원회**

**(한국산업융합협회 제안)**

## 목 차

□ 추진배경 및 필요성.....	3
□ 국내외동향.....	4
□ 현행 산업융합관련법과 제도의 문제 및 애로사항.....	6
□ 법과 제도상 세부적 개선내용.....	8
□ 기대 효과(경제적 파급효과 및 고용 창출 효과).....	18
□ 정책과 법제 필요한 제언.....	21

□ 추진배경 및 필요성

- 세계 경제는 지난 20년간 경제 패러다임이 포스트 산업경제에서 정보경제, 디지털 경제에서 창조성 중심의 창조경제로 전환하고 있어 지식, 기술, 학문간 융합으로서 다양한 융합이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변화
- 글로벌 융합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, 빠르게 변화하는 융합 산업을 지원하기위해 산업융합촉진법 포함, 스마트 정책 관련법의 제정 및 제도 개정이 필요
- ICT 산업간, 단순융합 패러다임을 넘어 새로운 스마트 융합형 산업 생태계 형성되고 있음.
- ICT 포함 융합 산업은 네트워크 인프라 및 서비스를 활용한 창조적 신산업의 창출과 이를 통한 경제 효율성 제고, 국가 경쟁력 확보에 주력.
- 민간 부문에서의 산업융합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융합 정책을 구현하고 융합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의 R&D, 산업융합 신제품개발, 인증, 마케팅 등에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.

## □ 국내외 동향

- 우리의 산업융합 정책은 IT융합 중심의 주력분야 융합전략에서 2012년 인문, 예술까지 포괄하는 범국가 융합전략 및 창조 경제론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
- 상상력과 창의성,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,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음
- 선진국 추격형 경제에서 우리경제의 선도형 경제로 변화
  - 경제성장률 중심에서 고용률을 높이는 경제운영방식변화
  - 인적자본, 과학기술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질적성장 추진
  - 단기성장중심에서 지식기반의 지속가능한 중장기성장추구
- 네트워크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, EU, 일본 등 선진국들은 대규모 투자와 병행하여 기술 시험 인프라를 경쟁적으로 구축
- (미국) 융합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혁신, 경쟁, 활성화, 민간, 개선이 핵심으로 경쟁원리에 입각한 시장개방형 융합 정책 전개
- (EU) 인문 사회과학 분야를 포괄하고 정부의 규제와 지원을 최소화하는 ‘융합화 전략’ 을 통해 경쟁력 강화
- (일본) 지방 정부 주도의 융합정책에서 민간주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율성과 창의성 글로벌화를 통

한 시장 개방을 유도

- (중국) 기술경쟁력 확보 및 新성장 산업 육성 차원에서 국가의 제도와 관련된 융합정책 추진

## □ 현행 산업융합관련 법과 제도의 문제 및 애로사항

- 현재의 『산업융합촉진법』과 『법 시행령』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각 부처간 협력미흡, 민간 산업분야의 융합화 노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부족, 민간기업들의 융합화 애로사항의 적극적인 해결이 미흡함으로 산업융합 촉진이 더디고 활성화가 미흡.
- 선진국들이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융합정책이 바뀌고 있는 추세에 반해 우리는 아직도 정부주도의 하향식분배 형태의 정책, 예산정책으로 민간자율적 융합촉진의욕저해
-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에 다양한 영역 분야를 포괄하고 적극적이고 활발한 산업융합을 활성화를 위해 상시적 법제도 정비 체계 구축과 민간 주도의 산업융합 촉진 필요
- (융합 인증) 현행 산업융합적합성인증제도가 인증절차가 복잡하고 국제적 인증기준에 맞지 않아 융합신제품 적기출시와 해외 글로벌 마케팅에 장애가 되고 있음
- (스마트 워크)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할 법안 부재
- (스마트 시티) 민간기업들이 신뢰하고 적극적 융합노력을 추진할 정책 로드맵 및 각종 건설 법규, 규격 등이 미비
- (스마트 인프라) 통합적 스마트컨버전스 관리시스템 미흡 및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호환성 시스템 부재
- (스마트 헬스) 스마트 원격진료를 통한 융합산업촉진과 사용자편의를 고려한 법적, 제도적장치 마련 미흡

- (스마트 문화예술) ICT분야 포함 여타산업과 예술문화분야와의 융합화 지원책 미흡으로 사업화와 글로벌화 장애
- (스마트 그리드) 기기/시스템/비즈니스 모델개발 및 전반적 인프라 지원제도 미흡
- (스마트 거버넌스) 산업융합정책의 컨트롤타워부재로 인해 종합적, 체계적,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예산집행이 어렵고 부처간 협력미흡으로 민간기업들의 융합촉진노력 저하
- 민간기업들이 융합신제품개발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적기에 가능케 해주는 체제가 현행제도상 미흡하여 정책적신뢰저하
- 융합 R&D 과제, 융합신제품 개발 등 기타 기업들의 애로사항 수렴 및 정책적 반영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책미비
- 융합신기술, 신제품출시에 따른 특허권 소유등 지적 재산권 문제 발생시 해결방안부재로 기업의 융합노력 저하우려
- 융합신제품에대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통해 외국기업과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해줄 수 있는 지원체제 미흡으로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마케팅활동에 애로사항 상존
- 융합신기술개발 초기투자비 및 융합신제품 출시에 따른 금융지원 및 세제상 우대정책 전무
- 해외유수연구기관, 기업들과의 공동R&D등 지원책 미비
- 융합신산업을 선도할 산업융합형 전문인력양성제도 미비

## □ 법과 제도상 세부적 개선내용

### 1. 산업융합촉진법 및 시행령의 전반적 개선방안

#### ■ 『스마트 컨버전스 발전 민간위원회(가칭)』 설치.

- 현행 정부 주도의 『산업융합발전위원회』가 형식적으로 운영될뿐아니라 민간부문의 제한적 참여로 인해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민간부문의 애로사항 및 정책의견수렴기능이 미흡하므로 적극적인 민간부문의 융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주도의 『산업융합발전위원회』와 대등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『스마트 컨버전스 발전 민간위원회』를 구성.

※ 산업융합관련 협회, 기업, 민간연구소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융합투자, R&D, 융합신제품 개발, 산업융합 활용 관련 애로사항 수렴 후 정책 반영

- 기업의 융합관련 애로사항 접수는 융합전문협회에서 관할

#### ■ 『스마트 컨버전스 인증센터(가칭)』 설립

- 산업융합의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고 창구를 일원화하여 업무 효율성극대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민간의 융합신기술인증을 적기에 함으로써 기업의 제품생산 마케팅에 도움을 줌

- 산업융합전문 협회중심의 『스마트컨버전스인증센터』를 설립하여 융합신제품의 해외 진출을 용이하게 할 필요 있음

※ 국제 시험기관 인증 협력체인(ILAC) 및 아세아태평양지역 (APLAC)은 정부차원이 아닌 민간 주도의 인증센터 운영을 선호함.

※ 스마트컨버전스 인증제도개선 위한 조속한 인증기술협의체구성

→민간 협회 중심으로 구성 필요



## 2. 분야별 법·제도 개선 주요내용

### ■ 스마트 워크

○ ICT 시대에 스마트 워크 활성화 촉진법 제정과 스마트워크 센터 품질인증 제도 도입 필요.

- 근로기준법,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스마트 워크 참여의무화, 추가근무, 육아병행 근무자에 대한 특례, 산업재해 적용을 위한 조건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시급

### ■ 스마트 시티(U-City)

○ 네트워크 지능화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, 물류비용 절감, 실시간 시설물 점검 등 도시 관리 효율성과 관련된 규제 완화 필요.

- 지경부, 교과부, 소방재청, 행안부, 기상청, 방통위, 국토해양부등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중앙 컨트롤타워가 필요

### ■ 스마트 그리드

○ 지능형전력망촉진법 시행과 관련 스마트 그리드 거점 지구 선정, 인증기관지정 표준화작업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

- 해킹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철저한 보안기준 마련 및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종합적 호환성을 완비와 관련된 제도 수립 및 표준 규격 마련 필요

## ■ 스마트 헬스

- 의료법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원격의료 조항들을 포함한 관련 조항들을 스마트 헬스 통합 관리 체제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할 필요.
- 의사와 환자간 원격 의료 행위 금지 및 의료 사고시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원격의료 사업이 비활성화.
  - ※ 노인응급 모니터링 시스템은 생체 신호를 통해 위험 상황을 인지하여 필요 기관(또는 가족)에 신호를 보내는 기능을 함-원격진료로 분류되어 인증 불가
- 건강관리 기기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단순한 기능을 가진 자가건강 측정용 융합 제품도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융합인증 불가 및 제품 출시 곤란
- 법적 책임과 한계를 명시하여 원격의료 사업 활성화, 다른 관련법 체계(의료법, 약사법)와의 균형 및 일관성 유지 필요.

## ■ 스마트 홈

- 스마트 홈네트워크가 가정내에 있는 모든 가전 및 기기가 제조사를 떠나 자유롭게 연동되고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며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택적 보장을 위해 기기 및 서비스 표준화 인증, 제도 등의 문제 해결 필요.
- ※ 초기 스마트 홈산업에 포함시켰던 IPTV나 u 헬스가 독자 산업임을 자처하며 스마트 홈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점, 소비자의 적극적인 서비스 요구와 핵심 서비스가 부족, 한번 구축하면 서비스 업데이트를 할 수 없는 건설사 납품 위주의 B2B산업으로 스마트 홈 기술의 발달을 저해함 .

## ■ 스마트 인프라

-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맞춤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능형 융합네트 워크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 융합네트워크 활성화의 법적 제도 정비 필요.

## ■ 스마트 농업

-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해 통신 인프라 및 지식정보 D/B의 구축, 스마트 기기와 다양한 실시간 정보를 연계해 농업생산성 증대,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한 소비자 신뢰 구축 등을 통해 스마트 농업 촉진

- 첨단융합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경쟁력 향상, 농축산물 유통구조의 단순화, 스마트 농업분야연구개발투자를 강화해 나가고 농어민 안전재해 보장제도 도입 및 농어업 재해 보험 확대 등의 법적 제도적 정비 필요.

※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, IPTV, 소셜 커머스 등을 활용한 새로운 유통방식에 대한 제도 및 법률의 정비

※ 농업·농촌기본법, 품질관리법,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스마트 유통체계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직거래시 원산지 표시, 품질 등급화, 유통과정에서의 파손, 변질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 마련 필요.

## ■ 스마트 문화·예술

-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융합 지원체계를 확

립하고 일반인이 적극 문화예술에 참여하도록 하는 민간  
지원체계 정립 필요

- ※ 스포테인먼트 콘텐츠, 3D, 4D영상 개발 등 기술과 문화·예술의 융합을 통한 신 비즈니스 기술개발지원과 제품 및 UI디자인, 콘텐츠 창작 등을 통해 혁신적인 부가효과를 창출하는 지원 체계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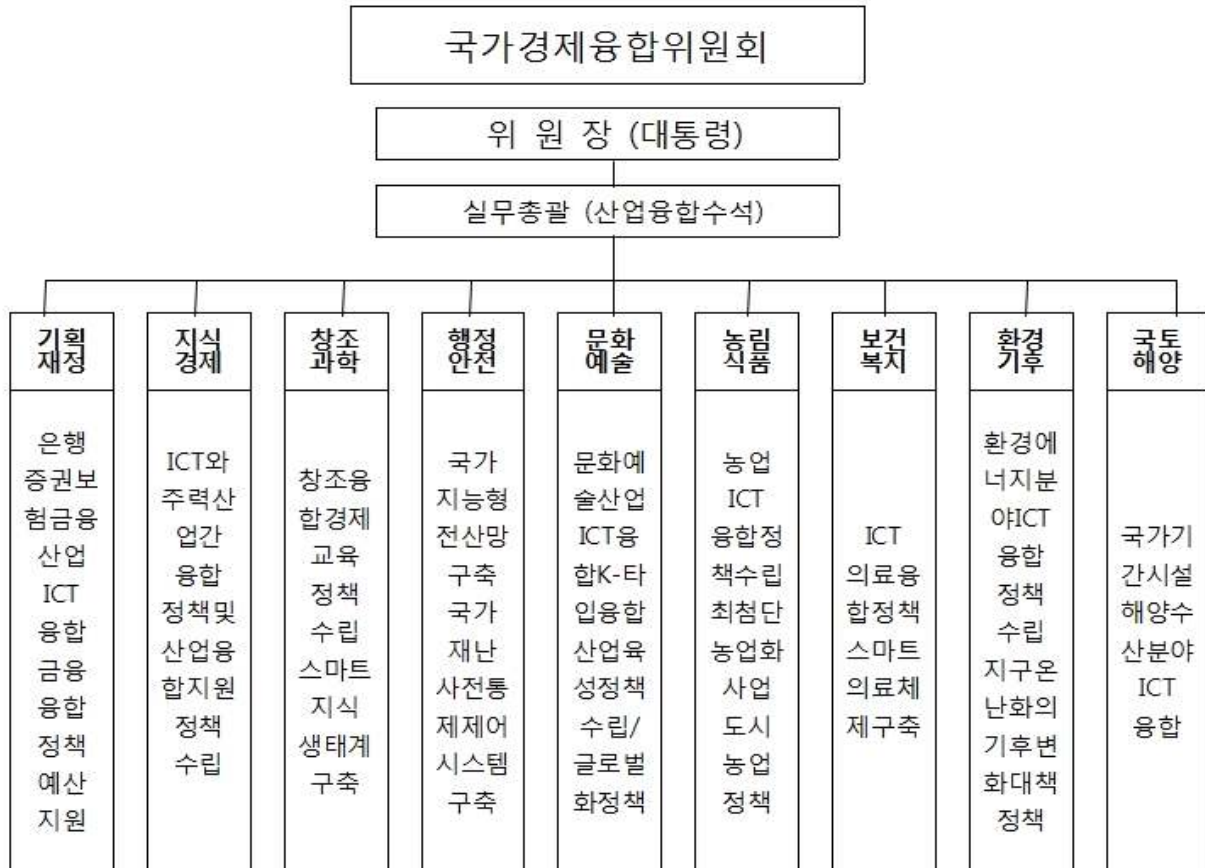
## ■ 스마트 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축

### ○ 『국가경제융합위원회(가칭)』 신설

#### - 필요성:

- \* 산업융합정책을 범부처가 체계적, 종합적인 수립집행하고 민간의 융합활동을 효율적으로 촉진,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드라이브를 할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설치 필요
- \* 부처간의 산업 융합정책협력부족으로 인한 민간부문의 융합 활동의욕 저하로 따른 국가 성장동력 약화 및 글로벌 경쟁력확보가 미흡했던 점을 보완 스마트 컨버전스 컨트롤 타워 마련 시급

#### - 조직도



\* 위원장: 대통령

\* 실무총괄: 산업융합 수석(신설)

- 기능 및 역할

\* 청와대내에 국가경제융합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융합관련 부처들을 총괄 지휘하고 스마트 융합 정책의 총괄 기획 및 예산 집행 등의 역할을 통해 산업융합정책의 종합적인 추진

[참고] 산업융합촉진법상의 산업융합발전위원회(위원장:국무총리)

와의 업무영역에 관한 사전조율 및 산업융합정책추진체제에 관해 협력체제구축필요

[참고] 산업융합촉진법상의 “산업융합발전위원회” 개요

- 위원장: 국무총리

- 간사: 교과부장관, 지경부장관

- 위원: 기재부, 교과부, 행안부, 문체부, 농림수산부, 지경부  
보건복지부, 환경부, 국토해양부, 방통위, 국과위원장  
중기청장,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등

- 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 수립시행

- 융합신산업 관계법령의 개선 및 권고 등

### 3. 스마트 컨버전스 지원제도 혁신 방안

#### ■ 『스마트 컨버전스 촉진 지원 펀드(가칭)』 구성

- 정부차원에서 산업융합촉진 전문펀드를 조성해 중소·중견 기업들이 우수한 융합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도록 제도적지원
- 중소 중견 기업들이 국내 및 해외로의 진출을 하기 위해서 융합 R&D, 융합신제품개발, 생산에 필요한 자금지원 필요

#### ■ 『스마트 컨버전스 보증 기금(가칭)』 설치 운영

- 『스마트 컨버전스 촉진 지원 펀드(가칭)』와 함께 산업융합 신제품과 우수한 융합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, 중견 기업들의 금융지원 보장 제도 필요.
- ※ 현행 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,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은 이용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워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산업융합기술개발을 촉진할 전문적인 보증기금 설치필요.

#### ■ 『스마트 컨버전스 특허권 분쟁조정위원회(가칭)』 구성

- 기업들간의 융합기술과 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 분쟁 발생시 법적인 절차 이전에 사전 조정 제도를 통해 원만한 해결 유도
- 융합 R&D과제를 총괄 관리, 이중 R&D과제 여부에 대한 심사와 출원심사 및 표준화까지 신속 일괄 지원하여 산업융합의 지적 소유권 보호와 융합 산업 활성화에 기여

- 산업융합 관련, 특허 등 연구 성과물,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 체계 및 지적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조정

### ■ 『스마트 컨버전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(가칭)』 설립

- 민간 차원에서의 산업융합 관련 우수 융합 제품과 기술에 한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 가능하도록 하는 맞춤형 기업 매칭과 사후 관리를 도와주는 적극적인 관리 체계.

→산업융합전문협회내에 스마트컨버전스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설치운영

- ※ 현재 많은 정부기관에서 해외 진출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일정한 규정과 제제가 많아 기업들의 접근이 어렵고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성과를 주는데 한계가 있고 애로사항이 많음.

### ■ 융합기술개발 및 제품출시 세제 지원

-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된 기업들에게 법인세 인하와 대출 세율 인하를 통해 적극적인 융합기술 개발투자를 유도함과 동시에 융합기술 개발의 기회 확대.

### ■ 『스마트 컨버전스 기술연구센터(가칭)』 설립

-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미래 유망 新융합 산업 영역 기반 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전문 기술연구 센터 지정 또는 신설
- ICT, 자동차, 조선, 의료, 건설, 에너지, 나노, 바이오, 전자등 전 산업 분야의 융합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력 확보와 해외 우수 융합기술 활용을 통한 글로벌 융합기술 연구체제



지원 및 R&D 프로세스 정립

■ 『스마트 컨버전스 전문인력 양성』

- 새로운 융합신산업을 선도하고 융합신제품을 개발하고 미래의 신성장동력을 주도할 산업융합형 인재 양성 필요.
- 융합 新시장을 주도해 나갈 IT, BT, NT, CT 등 핵심 융합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융합원천기술 중심의 고급 전문인력 및 산학연계 프로젝트의 확산을 통한 실무 융합인력 양성

※ ①대학, 대학원에서의 융합인력 양성 과정

- 융합 특성화 대학원지정 및 대학내 산업융합학과 개설

②산업 현장의 재직자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제도적 장치 마련

- 산업융합현장 교육과정 개설 및 융합전문자격증제도 도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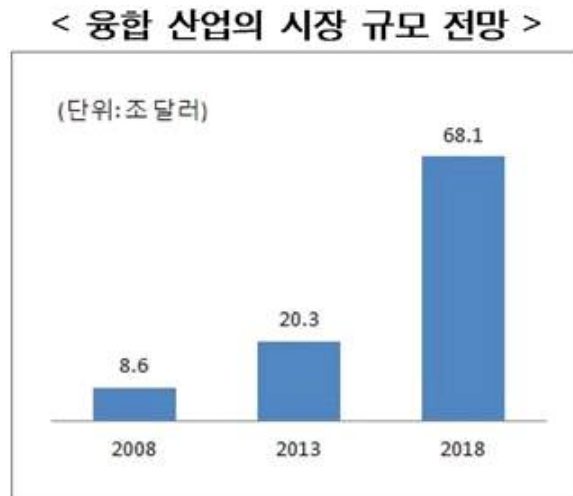
\* 산업융합전문협회 중심으로 기업 현장 재직자 대상 산업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여 스마트 컨버전스 민간 활동 촉진 필요.

□ 기대 효과(경제적 파급효과 및 고용 창출 효과)

■ 스마트 컨버전스 신산업 확대 및 고용창출

○ 산업융합촉진법의 개정 및 스마트 워크 촉진법등 산업융합 분야별 법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한 범부처간 종합적인 체제의 스마트 컨버전스 인프라, 활성화 전략 수립.

- 국내 산업융합 시장은 IT융합 R&D 투자, 매출 증대 등으로 2008년 8.6조불 2018년 68.1조불로 성장예상



자료: 지식경제부.

- 스마트 시티 시장규모 ( '08년 3600억에서 ' 18년 1조 2,800억원으로 4배 증가 예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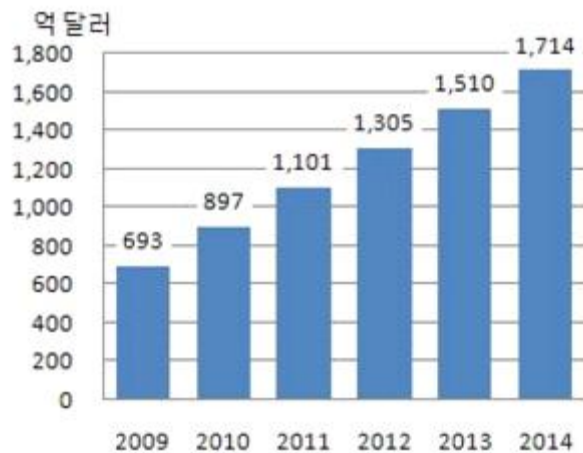
스마트 시티 파급 효과 (자료: U-City사업단 2009)

구 분	2008	2011	2013	2018
국내생산액(천억원)	3.6	9.1	10.0	12.8
세계시장규모(억달러)	1,921	2,063	2,160	2,408
고용(천명)	8.4	40.3	63.1	109.3

스마트워크 활성화 촉진법이 제정된 후의 비전 ( '11년 4만명에서 ' 18년 11만개의 누적 일자리 창출 가능)

- 세계 스마트 그리드 시장 전망 ( '09년 693억달러에서 ' 14년 1,714억달러로 약 3배 증가 예상)

< 세계 스마트그리드 시장 전망 >



자료: Zpryme (2009).

- 스마트 컨버전스를 통한 융합 산업의 증가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, 생산 및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새로운 산업군을 개척하여 고용창출로 이어져 2017년까지 238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, 우리 산업 발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.
- 정우수, 김사혁(2011)의 연구에서 추정한 스마트 네트워크 활용산업의 고용유발 계수 이용(스마트 네트워크 산업은 10억원 당 5.865명으로 추정)

< 스마트컨버전스 산업의 고용효과 예측 >

[단위: 만명]

	2013	2014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
고용	40	43	47	52	56	61	67	73
누적 고용효과	40	83	130	182	238	299	366	439

○ 스마트 컨버전스 산업을 통한 수출증대와 산업발달에 따른 조세 수입을 통해 산업부국과 국민의 삶의 질 지수(UNDP)를 ‘11년 15위에서 17’ 10위로 이끌고 선진국 대열에서 선두를 설 수 있는 준비 마련.

■ 국제간 비교(2011년 기준)

국가명	순위(위)	전년대비 순위변동	HDI	기대수명(세)	평균 교육연수 (세)	기대 교육연수 (세)	1인당 GNI(\$)
노르웨이	1	-	0.943	81.1	12.6	17.3	47,557
미 국	4	-	0.910	78.5	12.4	16.0	43,017
일 본	12	▽1	0.901	83.4	11.6	15.1	32,295
<b>한 국</b>	<b>15</b>	<b>▽3</b>	<b>0.897</b>	<b>80.6</b>	<b>11.6</b>	<b>16.9</b>	<b>28,230</b>
핀 란 드	22	▽6	0.882	80.0	10.3	16.8	32,438
중 국	101	▽12	0.687	73.5	7.5	11.6	7,476
최상위 47개국 평균	-	-	0.889	80.0	11.3	15.9	33,352

\* 주:1, 2011년에는 UNDP에서 OECD 평균을 내지 않고 순위별 4분위로 그룹지어 평균을 산출함

## □ 정책과 법제 필요한 제언

- 산업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융합촉진법을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정하고 스마트 워크 활성화 촉진법 등 개별산업별 융합촉진법의 조기제정 및 시행을 통하여 민간 차원에서 산업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기구를 설치하고 지원.
- 선진국들의 민간주도로 융합정책이 바뀌고 있는 추세와 흐름을 같이 해 우리의 정부주도 하향식분배형태의 정책, 예산정책 등을 민간자율적 융합촉진 방향으로 전환하고 지원
- 산업융합 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를 체계화하고 정립하여 융합신제품 적기출시와 국제 시험 기관 인증 협력체와 민간 주도의 인증센터 운영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글로벌 마케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 지원이 필요
- 스마트 워크와 스마트 시티, 스마트 인프라, 스마트 헬스, 스마트 홈네트워크에 대해 미흡한 각종 법규제의 정비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스마트 그리드를 위해 기기/시스템/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전반적 인프라 지원제도를 통해 민간 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 및 융합산업 촉진
- 산업융합정책에 대해 종합적, 체계적,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예산집행을 할 수 있고 부처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기업들의 융합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산업융합정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

- 융합 R&D 과제, 융합신제품 개발 등 기타 기업들의 애로 사항 수렴 및 정책적 반영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해외유수연구기관, 기업들과의 공동R&D 등 지원책 마련
- 융합신기술, 신제품출시에 따른 특허권 소유등 지적 재산권 문제 발생시 해결방안 및 융합신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외국기업과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해줄 수 있는 지원체제 마련으로 중소기업들의 해외마케팅활동에 적극적이도록 유도
- 민간 기업들이 융합신기술개발 초기투자비 및 융합신제품 출시에 따른 금융지원 및 세제상 우대정책 필요
-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주도하고 융합신산업을 선도할 산업융합형 전문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책 필요. 대학과 대학원에서의 융합인력 양성 및 산업 현장의 재직자 전문인력 양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융합 인재 양성 필요.
- 스마트 컨버전스는 신제품, 신기술에 한정된 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개발, 문화 예술과 관련돼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빠른 문화 융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융합화 지원책과 사업화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
- 스마트 컨버전스가 전 산업에서 활발하게 촉진되기 위해서 정부는 산업융합의 비전과 목표, 정책안들에 대한 제시만을 주고 실질적인 산업융합 촉진 활동 등은 민간주

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책임감있고 효율적인 산업융합확산.